



해외조세동향보고

Issue 10, 2009년 11월

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호주정부의 정책대안

지난 11월, OECD-ASEAN 국제조세세미나에서 발표된 "Australia's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" Mr. Tony Coles(호주 재무부 소속)의 강연내용을 정리함

□ 호주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기와는 관계없이 2009년 1월부터 소득세 개편을 추진함 (2008-09 회계연도)

○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정

From 1 July 2008		
Income range		Marginal tax rate
\$0	A\$6,000	0%
A\$6,001	A\$34,000	15%
A\$34,001	A\$80,000	30%
A\$80,001	A\$180,000	40%
A\$180,001+		45%

From 1 July 2009		
Income range		Marginal tax rate
\$0	A\$6,000	0%
A\$6,001	A\$35,000	15%
A\$35,001	A\$80,000	30%
A\$80,001	A\$180,000	38%
A\$180,001+		45%

From 1 July 2010		
Income range		Marginal tax rate
\$0	A\$6,000	0%
A\$6,001	A\$37,000	15%
A\$37,001	A\$80,000	30%
A\$80,001	A\$180,000	37%
A\$180,001+		45%

□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

○ 예금자 보호정책 시행

- 호주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예금 및 펀드에 대해 예금보호 정책을 시행
- 금융당국은 80억 호주달러를 모기지 파생증권에 투자함

○ 경기 자극정책 (Stimulus Payments): 경제안정화 전략

- 총 100억 호주달러 규모(GDP대비 0.95%)의 경제안정화 전략 시행을 2008년 10월 발표

○ 제1단계 : 소득지원 정책

- 1인가구 및 자녀가 없는 기혼가구
 - 연금생활자 및 은퇴자에 대한 장기 소득안정자금 지원
 - 1인 가구에는 A\$1,400 및 기혼 가정에는 A\$2,100 현금 지원
 - 총 48억 호주달러 지원 (2008년 12월)
- 자녀 부양가구에 대한 지원
 - 1자녀 당 A\$1,000 지원
 - 약 190만 가구 혜택
 - 총 39억 호주달러 지원
 - 현금지원액은 모두 소득세 면제
- 국가건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계획
 - 호주 정부는 GDP 대비 3.8%의 재원을 국가건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 (총 420억 호주달러)
 - 2009년 2월 발표 및 3월 시행

○ 제2단계: Tax Bonus

- 연방소득세 납세자에 대하여 지급하며, 행정상 편의를 위해 수혜자는 납세해야 할 세액이 있어야 할 것임
- A\$900 ~ 250를 지원하며 이는 소득구간에 따라 정해짐
- 또한 수혜자는 수년전부터 소득신고를 했어야 함
- 정부로부터 받은 수혜액의 40% ~ 70%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

○ 가계지출 자극 정책

- 호주정부는 가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다음의 소득지원 정책을 시행
- A\$900 기본 지원액 및 부양자녀가 학생인 경우 A\$950,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경우 A\$950를 지원
- 총 비용 120억 호주달러가 지출되었으며, 이는 GDP대비 1.1%에 달함

○ 소기업 세제 지원 (Small Business Tax Break)

- 소기업이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자산가액의 50%를 세액에서 공제

○ 일반기업 세제 지원 (General Business Tax Break)

-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자산에 대해 자산가액의 30%를 세액에서 공제
-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자산에 대해 자산가액의 10%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며, 이는 2010년 내에 설치할 자산에 한함
- 이와 같은 세제혜택의 총 비용은 4년간 37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

□ 그 밖의 정책

- 호주 내 9,540개 학교 증·개축 예정
 - 도서관, 강당, 언어교육센터 등 신설 예정
 - 필요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

- 에너지 효율주택 프로그램
 - 태양열 및 전기 이용 주택에 대한 지원 등

- 그 외의 정책
 - 공공시설 신축
 - 도로안정성 개선사업
 - 지방 공공시설 확충 사업 등